

법령 I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이 아닌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대상자원이 되고 60세가 되는 날에 대상자원에서 제외된다.
- ④ 외국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②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본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와 같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본지침은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으로서 국무총리가 5년마다 작성한다.
- ④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은 물론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도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집행계획은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자원의 조사·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권자는 그 계획 중 다른 계획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자에게 조사 또는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③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필요한 사항의 신고는 업체의 장뿐만 아니라 인력자원대상자에게도 하게 할 수 있다.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는 주무부장관이 한다.
- ②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거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는 국가정보원장이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그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상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 ④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②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고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교부한다.
- ③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동시관리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다.

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유(公有)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훈련으로 훼손된 경우, 주무부장관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그 소유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무총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ㄴ.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ㄷ.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국가의 재정상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그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때에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때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 ②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장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경찰대학의 신입생으로서 재학 중인 남성(23세)은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산업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입학한 날부터 6년이 지나 지역 민방위대 조직 제외 사유가 소멸한 남성(31세)은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지방우정청장은 그 소재지 관할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공단체등의 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를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시설·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상대피시설의 안내와 유도를 위한 빨간색 바탕의 안내표지판과 흰색 바탕의 유도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점유자에게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요원인 甲의 교육훈련 및 그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으며, 甲을 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ㄴ. 甲이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 없어 그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ㄷ. 甲에 대한 전지 교육훈련 통지서는 관할 읍·면·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 ㄹ. 甲이 전지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甲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의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9/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② 시·도지사가 동원명령을 발한 경우에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은 시·군·구가 부담하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③ 민방위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자가 긴급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의 응급 치료를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여부를 불문하고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한다.
- ④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급박한 사정하의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 제거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② 등화 및 음향의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 ④ 등화관제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사이에 실시하되, 용광로화염은 공습관제뿐만 아니라 경계관제를 실시할 때에도 은폐 또는 소광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최소한의 화염류는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ㄴ.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영리목적의 상설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 ㄷ. 접경지역의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ㄹ.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하며,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지휘·감독·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지역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 ② 직장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직장연합 민방위 대장이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 ③ 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특별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문 2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상 민방위대의 평상시 임무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ㄴ.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ㄷ.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 ㄹ. 민방위 교육훈련
- ㅁ.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① \neg , \perp
② \sqsubset , \square
③ \neg , \perp , \exists
④ \sqsubset , \exists , \square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 ②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 단위의 민방위대와 시·군·구 단위의 민방위기술지원대를 구분 없이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 ③ 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성년 남성으로만 편성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공공기관은 포함되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원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동원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민방위사태의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부여는 민방위사태 수습현장 등에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명하여야 한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이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원명령 발령 후 72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 ㄴ. 국방부장관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 ㄷ. 질병 등의 사유로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고용주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ㄹ. 동원연기의 신청을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neg, \sqsubset
② \sqcup, \sqsubset
③ \neg, \sqcup, \sqsubset
④ \neg, \sqsubset, \sqcup

문 27. 국방부장관은 서해안 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군대원 甲, 乙, 丙, 丁에게 A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명령을 발하려고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 연기 또는 보류 사유가 없는 甲이 동원명령 발령 지역인 육상에 있는 경우, A장소에서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시간은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이다.
- ㄴ. 乙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라면 국방부장관은 동원을 보류해야 한다.
- ㄷ. 동원을 연기하려는 丙이 천재지변으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술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천재지변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ㄹ. 丁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라면 동원을 보류할 수 있지만,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라면 동원을 보류할 수 없다.

- ① \neg, \sqsubset
② \sqsubset, \sqsupset
③ \neg, \sqcup, \sqsubset
④ \neg, \sqcup, \sqsupset

문 28.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훈련 및 소집통지서의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으며,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 ②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수임군부대의 장이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할 경우에, 그 시점은 훈련소집일 14일 전까지이다.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문 29.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甲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금과 휴업 보상금의 최대 금액의 합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되었다.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2017. 3. 2.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를 입은 甲은 치료를 위해 25개월(76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甲의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군인연금법」상 甲의 전역 당시 계급 및 호봉과 같은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 보상금은 5,000만 원이지만, 병(兵)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 보상금은 4,500만 원이다. 아울러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변동이 없다.

- ① 7천 3백만 원
- ② 1억 1천8백만 원
- ③ 1억 2천1백만 원
- ④ 1억 2천3백만 원

문 30.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마을에 침투한 무장폭도를 체포하기 위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2018. 3. 1. 수탁경찰서장 甲은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乙의 재산을 제거하는 긴급조치를 하였다. 乙은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상금지급신청을 하려고 한다.

- ① 甲은 긴급조치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乙이 2018. 4. 2. 10:00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 국방부장관은 2018. 5. 2. 24:00까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해 2018. 10. 1. 10:00 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乙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2018. 11. 30. 24:00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1.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비군대원 甲은 수탁경찰서장의 동원명령을 받고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였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데도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수탁경찰서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甲이 치료를 받게 하였고, 치료비는 현재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 ① 甲에 대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로 한다.
- ② 甲은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수탁경찰서장은 甲의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관할 군사령관이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치료비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문 32. 「예비군법 시행령」상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 ② 여성 예비군대원은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와 예비군화가 아닌 것을 착용할 수 있다.
- ③ 예비군특수복으로서 근무복은 사계절의 구별에 따라 구분한 복장을 착용한다.
- ④ 예비군특수복으로서 야전상의 점퍼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착용한다.

문 33. 예비군법령상 벌칙 규정이 정하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이 다른 것은?

- ①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입하는 사람의 검문이 허용되는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
- ②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
- ③ 국방부장관이 전시, 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원을 명령하였는데, 그 동원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
- ④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탄약을 과실로 분실한 사람

문 34.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임무가 아닌 것은?

- ①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 ② 무장 소요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의 무장 소요 진압
-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지원
- ④ 적 또는 무장공비가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문 3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이전(以前)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 ②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예비군중대장에게 통보한다.
- ③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하여야 한다.

문 36. 예비군법령상 경찰서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 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을 할 수 있다.
- ② 예비군대원 동원 권한을 위탁받지 않은 경찰서장도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지 않은 경찰서장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에 의한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비군 동원 및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장을 위한 무기 등의 유지·관리 임무를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문 37. 예비군법령상 산업단지가 아닌 직장단위로 설치된 직장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직장의 장이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 ㄴ.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ㄷ.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및 통합직장에 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ㄹ. 직장방위협의회의 위원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 ② 재난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라고 한다.
- ③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의 재난 관리주관기관이다.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신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군에 황사로 발생한 재난 신고를 받은 A군의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A군에 황사로 발생한 재난 신고를 받은 A군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대해서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고,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는 이를 확인·종합하여 중앙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국 내 B지역에서 황사로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B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B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 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황사로 해외재난이 발생한 중국 내 B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동일하다.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회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재난에 관한 대책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범죄안전에 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의 결과를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④ A군의 군수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수립 또는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안전조치 명령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공단체의 장은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때에는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구두로 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구두로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하면 그 조치를 할 수 없다.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시·군·구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하고,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후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보·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 ②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재난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45. A군의 일정 지역에서 화생방사고로 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군의 군수는 사고지역을 여행 중이던 甲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A군의 군수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A군의 군수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에 있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A군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화생방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응급조치로서 경보를 발령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직접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
- ③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피해 및 재난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해당 본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③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② 관할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과 관련된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착오로 복구비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복구비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
|---|
| ㄱ. 안전정보의 수집 및 체계적 관리 ㄴ. 안전관리현장의 제정·고시 ㄷ.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ㄹ.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결과 공표 |
|---|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